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제한 중단해야”

광주인권사무소, 전국 최초로 학교 직권조사 직접 수행 호남권 150개 국공립 중 30.6% 사용 제한...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일선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전수조사하는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그동안 직권조사는 인권위 본부에서 모두 직접 시행했는데, 지역 인권사무소가 직권조사를 건의하고 직접 시행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북 지역 국공립학교 중 46개교(전체 피조사 학교 중 30.6%)가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무소에서 직권조사 직접 수행 ‘첫 사례’

인권위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진정은 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접수되는 사건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휴대전화 사용 관련 131건의 진정 사건이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특히 2019년 17건, 2020년 11건, 2021년 43건, 2022년 60건 등으로 해마다 진정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학교별로 하나하나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비슷한 진정이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접수되는 상황이 증대하고도 판단한 광주인권사무소는 직접 직권조사를 건의했고, 결국 수행까지 하게 됐다.

지역 인권사무소가 직권조사를 직접 건의·수행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각 지역의 인권사무소는 출범 이후 교정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만 수행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장 접근성 강화와 신속한 조사를 위해 각급 학교의 인권침해 사건, 장애차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권이 확대됐다.

조사권이 확대된 지는 오래됐지만 각 지역 인권사무소는 개별 조사만 수행하거나, 직권조사 대신 학교 실태를 모니터

링해 인권위에 보고하는 역할만 수행했다.

직권조사가 필요하면 지역사무소 대신 인권위가 직접 수행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부터 바뀌었다.

인권위는 올해 내부 업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지역 인권사무소도 대단위 피해자가 발생한 진정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를 직접 건의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진정 사건이 반복적으로 접수돼 증대하고도 판단해 바뀐 내부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건의해 시행했다”며 “앞으로 지역 인권사무소의 직권조사 직접 수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국공립학교 30.6%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광주인권사무소는 전수조사 성격의

직권조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광주, 전남·북 국공립학교 150곳에 한정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실태를 조사했다.

직권조사 결과, 150개교 중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로 조사 대상 중 30.6%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로, 그중 상당수(20개교, 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권 보장’(14개교, 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46.7%), ‘학습권 보장’(2개교, 6.6%)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였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46개 학교 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은 10개교, 관련 규정을 삭제한 4개교 등 14개교를 제외한 32개 학교에 대해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전북도교육감 등에도 위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별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문화를 고민하기 위해 별도의 토론회도 오는 31일 진행한다.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오복기자·연합뉴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30일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이 관내 한 떡 제조·판매업소에서 추석을 앞두고 성수 식품의 유통기한과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예산 재심의를”

공무원연맹 전남본부, 하위직 처우개선 촉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는 168만원으로,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인 19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5년 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실질적으로 삭감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5%이고 올해 물가상승률은 7%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2021년 기준 임직인 지 5년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공무원의 숫자는 1만693명에 달했다”며 “2017년 5천1

81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이 중 8·9급 공무원이 90%라는 것을 보면 공직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만큼 책정해야 한다”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후의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야외 활동시 일본뇌염 조심하세요”

전남보건환경연구, 합평서 경보 수준 모기 채집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합평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67.2%로 일본뇌염 경보 발령 수준으로 많이 채집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 부산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 발령 수준으로 확인된 이후 5일 만인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경보는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들어 전남에서 작은빨간집모기는 5월까지 채집되지 않았으나 6월 6마리(0.1%), 7월 851마리(9.9%)로 점차 늘다가 8월 합평지역 우사에서 788마리가 대량으로 발견돼 전체(1천172마리)의 67.2%를 차지하는 등 경보 발령 수준에 이르렀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매개체 변화 파악, 일본뇌염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사, 도심지역, 철새도래지, 공원 등에서 모기 분포·밀도, 병원체 감염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250명 중 1명(0.4%)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 증상은 발열, 구토, 설사, 심하면 급성 뇌염으로까지 진행해 숨질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숨졌다.

임현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1과장은 “우리나라는 7-10월 매개모기 밀도가 높고 8-11월 40대 이상에서 환자 발생이 전체 발생의 93% 이상을 차지한다”며 “여행 계획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고 야외 활동 시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광주도시공사, 태양광 발전소 착공

교통문화연수원 유휴부지 활용 377kW 규모...탄소저감 효과도

광주도시공사는 30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사진〉

이날 착공식은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공사는 연수원 주차장 1천735㎡ 부지에 377kW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발전소는 오는 10월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완공되면 연간 485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연간 220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정민권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 계획과 연계해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산형 전원 활용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탄소 저감을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소출)

판상형 방수제, 기층수용성페인트, 방수용성페인트, 방수용성페인트, 방수용성페인트

벽체, 콘크리트, 타일, 기와,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회색)셀프판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한국화학연구원

DREAM CHEMICAL KOREA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